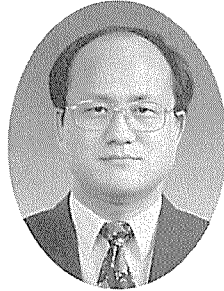


2000년 환경정책 주요 추진방안



최 홍 진
〈 환경부 대기정책과 서기관 〉

I. 머릿말

새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문제(Y2K)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Y2K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다. 다행이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두고 준비를 잘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견해와 일부 선진국의 의도된 상술로 인해 발생한 일(happening)이라는 견해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새천년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걸쳐 비전(Vision)과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 Y2K 문제에서와 같이 모두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격변하는 또다른 세기를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결코 바람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자연을 인간밖에 존재하는 외적 환경(外的環境)이자 정복·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중

래의 사고(思考)와 환경관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에 앞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근원적·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천년 초기에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원년인 2000년에는 「환경부문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공기 등 기초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환경관리 선진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인바 환경관리 여건 및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먼저 고찰한 후 석유업계와 관련된 주요 환경정책 위주로 추진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경관리 여건 및 환경정책 추진방향

자연 및 인구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의 열악한 환경용량으

로 인해 환경관리가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총인구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6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오염정화 등의 다양한 환경기능을 수행하는 산림 및 깃벌이 녹지개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여건은 지난 30여년간 총 투자와 소비, 특히 대외교역량의 증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산업활동 증가의 역기능으로 다양한 형태의 많은 환경문제가 단기간에 표출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 및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주화·지방화의 진전으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의 심화,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의 확산 등으로 환경정책 추진에 심각한 애로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96년 세계무역기구(WHO) 체제 출범 이후 경제·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와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환경을 중심으로한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환경관리여건을 감안할 때 21세기 환경정책의 주요 추진 지향점이 될 패러다임과 목표는 <표-1>과 같다.

전환된 패러다임하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세기 환경정책 추진방향으로는 ①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환경보전이 되도록 하는 “통합적 사고와 행태”를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공감대 형성 및 직접 실천 유도, ② 공급중심, 팽창위주의 정책기조로부터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여 “수요관리, 효율중심”의 환

경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절약 확산, 재활용·재이용 촉진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절약 정착, ③ 전주기분석(Life Cycle Analysis) 도입을 통한 제품의 환경성 검토강화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 강화, ④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환경행정 추진, ⑤ 환경기술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⑥ 환경관리의 고도화·전문화, ⑦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성 등이다.

<표-1> 21세기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목표

| 구분 | 패러다임의 전환 | | 정책목표 |
|--------|---|---------------------------------|---------------------|
| | 과거의 지배적 유형 | 새로운 대안적 유형 | |
| 자연관 |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자연=정복·지배·이용의 대상) |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 이유를 갖는 자연 | 자연과의 공존·공생 |
| 성장·발전관 |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적·경제적 성장(적도는 다소비·양적 생활기준) | 단순·단출한 삶의 방식과 심미적인 만족(기준은 삶의 질)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 사회관 | 국가적 또는 중앙통제, 피라미드 위계 | 지역공동체 중심, 개인의 자율·창의·참여기반사회 | 자율·책임관리 소규모 환경공동체 |

III. 2000년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

III-1. 선진환경관리기반 정립

심각해져 가는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위기로 국가의 환경관리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시책 추진수단을 선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석학과 전문가를 초청, 국제 환경보전 전문가 포럼

을 개최(2000. 5)하여 새천년의 환경정책 방향을 토의하고, 새천년의 환경비전과 전략을 담은 『21세기 국가환경비전』을 마련하여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선언할 계획이다. 동 비전에는 새천년의 환경윤리, 가치관과 자원절약적 생산·소비, 환경친화적인 개발, 생태공공체 구축방안 등이 포함되게 된다.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개발·행정계획중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의 환경성 검토수단으로 그동안 국무총리훈령(제299호)에 근거하여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하였으며(99. 12), 2000년 8월부터는 이를 실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종래에는 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해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여러 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환경·교통·인구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99. 12)하였으며, 각종 영향평가 통합·운영절차를 마련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과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환경사랑 실천을 확신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cyber) 환경교육원』 및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센터(NEITIC, <http://www.konetic.or.kr>)』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이버 환경교육원은 모든 국민이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사이버 환경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학습자료센터, 자연사박물관, 환경체험학습관, 환경정책교육원, 환경교사연수원 등 5개 모듈(module)로 구성·운영하며, 환경교사연수원을 이수한 교사는 환경 부전공 교사 자격을 인정하게 되는데 운영은 이화여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하게 된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센터(NEITIC)는 국내·외 기술정보 및 시설사업 정보, 기술인력 알선, 기술복덕방, 유효설비 알뜰시장, 환경사랑

방, 환경쇼핑몰, 환경 홍보·교육게임등 다양한 모듈(module)로 구성·운영하며,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무료로 개설해주고, 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된다.

환경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환경산업을 2000년대의 유망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등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환경기술·산업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환경중시 경향이 확산되면서 세계 환경시장도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국내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낙후된 환경기술을 수출전략분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G-7 환경기술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온·고효율 여과포실용화기술 등 127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 이외에도 벤처기업 활동기반 강화, 유망 신기술 실용화사업 확대, 국내·외 선진기술·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III-2.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대책 추진

총체적인 자연환경을 생태계라 하는데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토이용은 생태계를 고려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육상과 해안선의 지형경관·식생(植生), 동식물 분포현황 등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광자원으로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0년 중에 반딧불학습장 등 15개소의 생태관찰시설 설치사업

을 지원해 국민의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폐금속광산지역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III-3.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도시지역은 매연, 오존 등이, 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악취, 오존 및 유해물질 등이 각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자동차 매연, 공사장 먼지, 공장악취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부터 환경신문고(전화번호 : 지역구분없이 "128")를 운영중인데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9년에는 신고건수가 특히 많이 증가(총104천건)하여 전년 신고건수 대비 1.8배나 되었는데 대기분야가 약 83%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분야 신고건수중 자동차 매연신고가 약 8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 오염원별로 다각적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2000년대 대기보전시책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보완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목표인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7개 오염물질(SO₂, CO, NO₂, TSP, PM-10, O₃, Pb)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이나 선진국의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완화·설정되어 있는 오염물질(SO₂, PM-10, Pb)은 환경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총먼지는 환경기준에서 제외하되 미세먼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하여 추진중인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벤젠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인 대기보전정책 수립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광화학평가, 유해대기물질

측정과 같은 특수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오염도 및 오염원인을 측정·분석하고, 점·면·이동오염원 등 모든 오염원에 대한 격자별(1km × 1km) 배출량 공간분포 데이터베이스(D/B)를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서울의 경우 약 85%)이며, 특히 대형경유차가 문제이다. 전체 자동차의 4%에 불과한 버스·트럭등 대형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대형경유차중 대도시에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경유 시내버스를 매연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오존원인물질도 60~70%까지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년에 국고 334억원 및 지방비 124억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 버스 1,500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는등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하여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등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의 노후된 경유 시내버스 약 5천대를 우선 교체하고, 2007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약 2만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표-2〉 2000년도 시·도별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7개시) | 전북 (전주) |
|-----|-------|-----|-----|-----|-----|-----|-----|-----|--------------|------------|
| 버스 | 1,500 | 480 | 2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70 | 50 |
| 충전소 | 30 | 7 | 4 | 2 | 2 | 2 | 2 | 2 | 8 | 1 |

※ 경기☆(7개시) : 수원(100대), 성남(60대), 의정부(30대), 광명(25대), 안양(20대), 부천(20대), 하남(15대)

2002년부터 휘발유 저공해 승용차(LEV) 보급 및 차세대 디젤엔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저공해연료 생산도 의무화하기로 자동차업계 및 정유업계와 합의(2000. 2)하였다. 제작차 기준강화를 통하여 휘발유차 오존원인물질은 약 70%, 경유차 매연은 약 5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료기준 강화를 통

해 황, 벤젠등 각종 오염물질을 약 35% 줄이게 된다, 연료유 품질기준은 2006년부터 심도 탈황(Severity)과 같은 새로운 시설 설치를 전제로 황함량 기준을 추가로 대폭 강화하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작업은 업계와 공동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유차 저공해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99년부터 추진중인 경유차 핵심부품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hybrid)차의 개발도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표-3> 2002년 연료품질기준 강화(안)

<휘발유>

| 항 목 | 현 행 | '02년 기준(안) | 유럽('00) | 미국('00) (고급연료) |
|-----------------|---------------------------|---------------------------|---------|-------------------|
| 황(ppm) | 200이하 | 130이하 ^{a)} | 150이하 | 130이하 |
| 벤젠(부피%) | 4.0이하 (2000.10.2) | 1.5이하 (2005년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 산소(무게%) | 1.3~2.3 (하절기 2.3이하) | 1.3~2.3 (하절기 2.3이하) | 2.7이하 | 2.0이하 |
| 방향족화합물 (부피%) | 35이하 | 35(30) ²⁾ 이하 | 42이하 | 27이하 |
| 올레핀 (부피%) | 23이하 | 18(23) ²⁾ 이하 | 18이하 | 8.5이하 |

주1) 황함량은 2002년 1년에 한하여 평균 120 및 최고 150을 선택

주2) 방향족화합물과 올레핀의 () 기준은 선택가능. 즉, 방향족화합물을 30이하로 할 경우 올레핀은 23이하로 할 수 있음

<경유>

| 항 목 | 현 행 | '02년 기준(안) | 유럽('00) | 미국('00) |
|--------|------|------------|---------|---------|
| 황(무게%) | 0.05 | 0.043이하 | 0.035이하 | 0.05이하 |
| 밀도 | - | 815~855 | 845이하 | - |

운행중인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는등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노상·차고지등에서 실시하는 수시점검을 각각 강화하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매년신고차량, 각종 검사결과 기준초과차량등을 대상으로 시·도 조례로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노상·차고지등에서 실시하는 수시점검은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2000년부터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다.

<표-4> 업종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시행시기 및 방지시설 설치기한

| 구 분 | 규제업종 | 시행시기 | 방지시설 설치기한 (기존시설) |
|-----------------------------|--|----------|---------------------|
| 기규제 (시행령 제39조) | 석유화학정제업 | '99.3.31 | '99년 말 |
| | 세탁시설 | '99.3.31 | '00년 말 |
| | 주유소, 저유소, 출하시설 | '99.3.31 | '04년 말 |
| 신규규제 (고시제 99-45 호) |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 '00.1.1 | '00년 말 |

최근에 대도시 및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오염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지난 '97년 7월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지역은 시·도에서 지난 2년간 연구·수립한 실천계획을 토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99. 12. 1)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부산·대구·광양만권역은 우선 실천계획 작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톨루엔, 자일렌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업종별 배출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굴뚝자동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인데, 기완공한 여천·울산관계센타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수도권관계센타도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측정자료는 상대정확도 확보후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지도·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과항목 : 총먼지, 아황산가스) 부과 대상을 종전에 1~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2003년 이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예시할 계획이다.

〈표-5〉 사업장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

| 구 분(사업장) | | '01년 까지 | '03년 까지 | '05년 까지 |
|-----------|-------|---------|---------|---------|
| 특별대책지역 | 1~3종 | ○ | | |
| 대기환경규제지역 | 1종 | ○ | | |
| | 2, 3종 | | ○ | |
| 상기 이외의 지역 | 1종 | | ○ | |
| | 2, 3종 | | | ○ |

III-4. 하천·호소의 수질개선 추진

맑은물공급 종합대책('93~'97)등 그동안 다양한 수질개선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상수원의 수질은 팔당호는 II 급수, 낙동강 하류지역은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한 III 급수 수준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98년에 한강수계대책을, '99년에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한데 이어 금년에는 금강·영산강 수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물이용부담금제, 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제, 대체식수원 개발 등 다양한 신규정책 수단을 반영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상수원에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

여 '99년에 수도권 팔당호 유역에서 자연정화시설 설치, 조류제거선 운영 등 녹조방지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이를 낙동강·대청호·주암호를 포함한 4대강 전역에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팔당호 및 대청호유역)내에서만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해왔으나 금년 10월부터는 설치제한 가능 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및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주요 상수원 호소 및 상류, 취수시설지역 및 상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 인접지역 도로에서 유류, 유독물 수송차량이 전복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99. 12)에 의거 금년 10월부터는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과 이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도로에서는 유류, 유독물 등의 운송차량에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III-5. 안전한 먹는물의 충분한 공급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고, 현재의 물소비 증가추세가 지속(1인당 사용량/일 : '90년 369리터 → '98년 395리터) 된다면 우리나라도 새천년 초기부터 심각한 물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댐건설에 의한 수자원 공급확대 정책은 댐적지 부족,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이미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기수립한 물절약 종합대책('99. 9)에 의거 금년에는 물절약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98년 3월부터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수도꼭지, 샤워기 등에 절수기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물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자하여 절수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중이다. 또한, 금년에 일정량 이상의 물다량 사용 신축건물에 쓰고 버리는 물을 걸러서 화장실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단 또는 신도시 조성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표-6〉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 비교

| 국가 | 일본 | 프랑스 | 독일 | 미국 | 영국 | 한국 |
|--------|-----|-----|-----|-----|-----|-----|
| 사용량(ℓ) | 357 | 281 | 132 | 585 | 323 | 395 |

※ OECD, Water Management : Performance and Challenges in OECD Countries, 1998

III-6.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처리

외환위기로 경제·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근검절약 분위기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가 고양되어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후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 폐기물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피해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금년중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제30조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쉬운 가전제품에 대해 시범실험할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재활용가능품목의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하고, 공공비축장고 확충,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68개소(매립 21, 소각 47) 설치를 추진하고, 대규모 광역소각시설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30 → 50%)하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대규모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일 50톤 미만의 공공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매립지 등 대규모 매립지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 등과 같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방치되어 토양·하천 등의 환경훼손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고, 보관방법도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표-7〉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강화내용

| 구분 | 현행 | 강화 | 강화시기 | |
|----------|--------|-----------------------------|--------|--------|
| 보관 기준 | 배출자 | 90~180일 | 45~90일 | '00. 8 |
| | 처리업자 | 90일 이하 | 30일 이하 | '00. 2 |
| 보관방법 | 육외보관가능 | 육내보관원칙,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육외보관 | '00. 8 | |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화학물질중 유통량이 많은 30여종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OECD의 대량 생산물질 위해성 평가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는 물질(37종)에 대한 환경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검색 및 시험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밖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생태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위해성 평가 항목 및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에 대비하여 법적근거, 위해성 정보체계 마련 등 국내 이행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IV. 맺는말

환경을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로 인식하여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근간으로 중·장기 환경대책을 추진한다면,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기업에 이윤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잘 보전된 좋은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참고로 하여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기대한다. ☺